

출제유형분석

	출제 문항	이론	법령		출제 문항	이론	법령
지방자치의 기초적 이해	5	5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	3		3
지방자치의 기본적 체계	5	3	2	지방자치의 재정	2		2
지방자치의 운영	4	1	3	정부 간 관계	1		1

0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이면서 강(強)시장 - 의회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② 기관통합형의 경우는 의결기구와 집행기구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③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강조되는 것은 기관대립형이다.
- ④ 지방의회가 그 책임 아래 전문행정인을 임명하여 행정을 처리하게 하는 형태는 시정관리관형이다.

해설 ①, ③ [O]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기관분립형)을 택하고 있으며, 기관대립형의 유형중에서도 강시장-의회형(시장우위형)에 해당한다. 기관대립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각 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운용해 나가는 방식이다.
 ② [X] 기관통합형이 아닌 기관대립형의 단점에 해당한다. 기관통합형의 경우에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알력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O] 시정관리관형이란 지방의회가 그 책임 아래 전문행정인을 임명하여 행정을 처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참고 2016 compass 지방자치론 p.84~87



0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명령·처분에 대해 주무부 장관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여 위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 장관이 직접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서면 고지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 장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해설 ① [X] 자치사무의 경우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행정자치부 장관이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71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X] 주무부 장관은 이행명령 후 필요한 행·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먼저 대법원의 위법성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직접×).

동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참고 2016 compass 지방자치론 p.196~200

▶ ④

03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를,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② 비례대표 광역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광역의회 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최소 5인을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 ③ 광역-기초의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모두 정당 참여가 허용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 ④ 지방선거 운동의 범위와 관련하여 선별금지방식(개발제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해설 ② [×] 비례대표 광역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광역의회 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때 최소 3인을 비례대표로 선출한다(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22조(시·도의회 의원정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인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④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참고 2016 compass 지방자치론 p.122, 123

▶ ②

04 다음 중 지방분권화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사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
- ② 행정의 주민참여 기회확대
- ③ 지역 설정에 맞는 근린행정의 실현
- ④ 업무수행에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여건 고려

해설 ① [X] 중앙집권의 장점에 해당한다. 중앙집권은 규모의 경제와 훈련된 관료제를 통한 기계적 능률성의 향상이 장점이다.
 ②, ③, ④ [O] 지방분권은 행정의 주민참여 기회확대, 근린행정의 실현, 역사적·지리적 여건 고려 등이 장점이다.

참고 2016 compass 지방자치론 p.13, 14



05 다음 중 우리나라의 도시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활권의 확대로 인해 도시구역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② 도시화로 인해 지역의 균형발전이 저해되어 인구분산정책이 필요하다.
- ③ 우리나라 도시화의 특징으로 종주도시화, 편향적 도시체계, 도시 간 불균형 성장 등을 들 수 있다.
- ④ 가도시화 현상으로 도심부의 슬럼화, 탈도시화, 인구유턴 등이 나타나고 있다.

해설 ② [O] 도시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도시 외 지역의 과소현상을 초래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므로 인구나 산업의 과도한 편중을 시정하는 인구분산정책이 필요하다. 도시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다른 하나는 편중된 인구나 산업을 용인하는 방법(과밀인구 수용책)이 있다.
 ③ [O] 우리나라 도시화의 문제점은 도시 간 불균형 성장(지방도시와 수도권 도시의 차이), 도시체계의 심한 불균형, 종주도시화 현상 등을 들 수 있다(종주도시란 한 나라에 하나의 초대형 도시가 있는 경우의 도시를 말함).
 ④ [X] 가도시화(pseudo urbanization)란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관련 없이 특정 지역에 인구의 집중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가도시화 현상으로 도시가 농촌인구를 흡인(pull-in)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즉, 농촌의 잠재적 실업자가 도시로 밀려(push-out)남으로써 가도시화 모습이 나타났다.



0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정무부지사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 ③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지만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 해설** ① [X]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26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② [X] 광역자치단체의 정무부지사는 단체장이 임명하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이다. 이때 지방의회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③ [O] 동법 제108조

동법 제108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④ [X]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법 제10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 2016 compass 지방자치론 p.60, 99, 100

▶ ③

0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및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 계층 간의 기능적 독립성이 강하여 행정의 통일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② 광역시는 지방자치법에 인구 100만 이상을 설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③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적인 인구 규모는 다른 주요 외국에 비해 작은 편에 속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설** ① [X] 우리나라는 계층 간 기능적 독립성이 낮은 편이다. 같은 내용의 사무를 두고 그 규모가 크면 광역지방정부가, 그 규모가 작으면 기초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식의 사무배분이 되어 있다.
 ② [X] 광역시의 지정에 대한 요건(인구규모 등) 법정화 되어 있지 않다.
 ③ [X]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적인 인구 규모는 다른 주요 외국에 비해 많은 편에 속한다.

참고 2016 compass 지방자치론 p.47, 51

▶ ④

08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일반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로 인정된다.
- ②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그 존립목적이나 수행하는 기능이 포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성격상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서비스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해설 ③ [X] 특별지방자치단체 역시 일반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자치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법인격을 가진 주체이다.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참고 2016 compass 지방자치론 p.39



09 다음 중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 ② 서울특별시 소속 4급 이하 일반적 국가공무원의 임면·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이 행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때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서울특별시장이 행한다.

해설 ① [X]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참고 2016 compass 지방자치론 p.46



10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 ②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
- ③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 ④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운영

해설 ② [X]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참고 2016 compass 지방자치론 p.67, 68, 73



11 다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
- ②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 한다.
- ③ 주민자치는 지방분권화를 핵심으로 한다.
- ④ 주민자치는 대내적 자치라고 할 수 있다.

해설 ① [○]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 반면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
 ② [○]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이며,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이다.
 ③ [×]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치행정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반면,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분권주의)을 강조한다.
 ④ [○] 주민자치는 주민의 참여에 의해서 자치를 운용해 나가는 대내적 자치라고 할 수 있다.

참고 2016 compass 지방자치론 p.7, 8



12 다음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설명이다. ㉠ ~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해 (㉠)을/를 징수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을/를 징수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을/를 징수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① 수수료 | 사용료 | 분담금 | |
| ② 분담금 | 수수료 | 사용료 | |
| ③ 공동시설세 | 재산세 | 사업소세 | |
| ④ 사용료 | 분담금 | 수수료 | |

해설 ㉠ 사용료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분담금

제138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수수료

제137조(수수료) ㉠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참고 2016 compass 지방자치론 p.164



13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투표는 국가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에 의해서도 실시될 수 있다.
- ②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결과는 권고적 효력밖에 가지지 않는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①, ②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제7조, 제16조, 제24조제1항·제5항·제6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X] 지자체장이 직권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O] 주민투표법 제9조 제5항

동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2016 compass 지방자치론 p.134



14 다음 중 지방정부의 권한은 주(州)정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지방정부는 주정부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 ① 딜론의 원칙(Dillon’s rule)
- ② 쿨리 독트린(Cooly doctrine)
- ③ 자치현장(Home rule) 전통
- ④ 주-자치정부(State-County) 협약

해설 ① [○] 딜론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아이오와 주 대법관이었던 딜론은 판결문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국극적인 권한은 주의회에 있으며, 지방정부는 주의회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만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참고 2016 compass 지방자치론 p.22, 190

▶ ①

15 신중양집권화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 ① 국제적 긴장감의 고조
- ② 고객지향적 행정의 강조
- ③ 광역행정수요의 증대
- ④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해설 ① [○] 핵무기 등 오늘날의 국제적 대치상황에서 유사 시 전(全) 국민을 총동원할 수 있는 집권적 체제를 필요로 하게 되면서 신중양집권이 촉진되었다.
 ② [×] 고객지향적 행정의 강조는 신지방분권의 촉진요인에 해당한다.
 ③ [○] 광역행정수요의 증가는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의 원조와 지도가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된다.
 ④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국가의 지방정부에 대한 즉각적인 지시와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신중양집권화의 촉진요인에 해당한다.

참고 2016 compass 지방자치론 p.16~20

▶ ②

16 다음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 지방의회의원은 전국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을 겸직할 수 있다.
- ㉡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는 법적의무가 아니다.
- ㉢ 기금의 설치·운영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다.
- ㉣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해설 ㉠ [×] 지방의회 의원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㉞ [○]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운용 등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다.

㉟ [×] 모두 사고일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동법 제52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㊸ [○]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

동법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참고 2016 compass 지방자치론 p.88~92



17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별시·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의 조정을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배분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② 최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 ③ 현재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된다.
- ④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없이는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설 ① [×]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 최근 보조금의 규모는 갈수록 영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과중(감소×)되고 있다.

③ [○]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 현재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구성된다.

④ [×] 국가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참고 2016 compass 지방자치론 p.168, 172, 173



18 다음 중 사무의 개별적 배분방식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어진 사무에 관한 한 중앙정부의 간섭이 증가할 수 있다.
- ② 개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의 형태를 이루는 경우 업무상의 부담이 크다.
- ③ 행정문제 처리에 있어서 시의성을 놓칠 수 있다.
- ④ 운영상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해설 ① [X] 개별적 배분방식이란 개개의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법을 통하여 사무종목을 지정하여 배분하는 방식이다. 개별적 배분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책임한계가 명확하고,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하여 자치권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

참고 2016 compass 지방자치론 p.71

▶ ①

19 다음 중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청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 ④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무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①·②·③ [O], ④ [X] 청원서에는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므로 기명이 원칙이다.

지방자치법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참고 2016 compass 지방자치론 p.92, 93

▶ ④

20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방재정법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절차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② 주민소송은 자신의 개인적 권리나 이익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주민감사청구 다음에 가능하다.
- ③ 주민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제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소환청구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해설 ① [X]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과 시행이 재량권이었으나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 이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하였다.

- ③ [×] 주민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 주민소환의 사유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강학상 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부당행위, 기타 비효율적·비합리적 자치운용 등이 될 것이다.

참고 2016 compass 지방자치론 p.132, 137, 180

